
[토론회]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

‘공영언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2016년 5월 25일 (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화관 제1세미나실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강원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경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 충북민언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 목 차 >

[발제]

공영언론 정상화를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박태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언론학 박사) 5

[토론]

<정당>

-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20대 국회의원 당선인)
-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20대 국회의원 당선인)

<학계>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현업>

- 언론노조 KBS본부 성재호 본부장
- MBC 박성제 해직기자
- YTN 김동원 공정방송추진위원장

<언론시민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우희창 공동대표

< 토론회 개요 >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1. 토론회 개최 취지

- 공영언론의 추락을 더 이상 방지할 수 없음. 총선 결과 드러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공영언론사 경영진은 성찰과 변화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불공정편파보도 기조를 고수하고 안팎의 개선 요구에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음
- 이에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당, 학계, 현업언론인, 언론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와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치권, 학계, 언론계 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여론을 환기하고 각계각층의 구체적인 실행, 협력 방안 또한 모색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 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2) 공동 주최

- 정당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현업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 언론시민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강원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경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 충북민언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3) 토론회 진행 계획

○ 주최단체 대표 인사말

-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

○ 사회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발제 : 박태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 언론학 박사 (30분)

○ 토론 (70분)

- 정당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당선인,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당선인),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당선인)

- 학계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 언론현업 : 언론노조KBS본부 성재호 본부장, MBC 박성제 해직기자, YTN 김도원 공정방송추진위원장

- 언론시민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대전충남민언련 우희창 공동대표

○ 마무리 발언 및 폐회

[발제]

공영언론 정상화를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 박태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언론학 박사)

<목차>

1. 공영언론 정상화, 왜 필요한가?

- 1)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
- 2) 공영 언론의 헌법적 가치
- 3) 언론자유 위기과 공영언론의 현 주소

2. 공영 언론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1) 공영방송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
- 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향
 - (1) KBS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
 - (2) MBC 지배구조 개선 방향
 - (3) EBS 지배구조 개선
 - (4) 공적 소유 언론의 지배구조 : YTN, 연합뉴스(연합뉴스TV)
- 3)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

3. 결론

1. 공영언론 정상화, 왜 필요한가?

1)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

- ▷ 근대 인권사상이 출현하고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천부인권적 권리로 여겨지면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가 됨
- ▷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제11조 : “생각 및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권리 중의 하나이다.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에 따른 이 자유의 남용은 제외 한다”
- 이로써 사람이 생각하고 표현하는 자유는 천부적 권리로 천명되었으며, 법과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해야함이 명시됨
- ▷ 1791년 미국헌법 개정 제1조는 연방의회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가 처음으로 헌법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가 됨

2) 공영 언론의 헌법적 가치

- ▷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4조 :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거주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규정 하였다.
- ▷ 우리헌법 제21조의 제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
- ▷ 이렇게 헌법에서 명시한다는 것은 천부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
- ▷ 현대 국가는 헌법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인간 기본권으로 보존하고 진흥해야할 적극적 의무를 지게 됨
- ▷ 공영언론은 언론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위(Avant-gard)
- 공영언론은 영국의 공공서비스 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뉴스통신사 및 보도전문채널을 포함 한 것으로 YTN과 연합뉴스의 연합뉴스TV를 포함 함

3) 언론자유와 공영언론의 현 주소

▷ 언론의 자유의 심각성 :

- 국경없는기자회(RSF : Reporters Sans Frontières)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는 180개국 중에 31위,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언론자유가 급격히 위축되어 2009년 69위, 2014년 57위, 그리고 2016년 올해는 70위로 추락
- 국경없는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에 대해 언론과 박근혜 정부 사이에 노골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
- 국경없는기자회의 발표는 우리의 언론이 여전히 정치권력에 의해서 억압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폭로된 것

▷ 공영언론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 MB 정부 이후 공영언론 위기의 주요 요인은 공권력에 의한 억압
- 2008년 YTN에서 6명이 해고(현재는 3명)됨
- 2008년 KBS에서 2명 파면, 1명 해임, 5명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음
- 2012년 MBC 파업으로 129명이 해고,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음
- 2014년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확인 등 소송에서 징계처분에 대해 모두 무효 판결이 나옴
- 언론이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자기 검열이 강화 : 제작 자율성을 가로막은 인사가 공영 방송 이사로 선임
- 현재 KBS는 고대영 사장 취임 후 “공영방송 장악 시즌2”라는 말이 돌고 있으며, MBC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파괴 저지”를 위해 파업을 단행 하기도 함
-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PD연합회 안주식 회장은 "국가주의 방송"이라 비판
- 공영언론의 정상화는 매우 시급한 사안 : 공영언론이 정상화 되지 않고는 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은 요원

2. 공영 언론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 공영방송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

▷ 과잉 정치화 :

- 사장 선임, 이사 선임 때 마다 정치적 정쟁화가 이루어지고, 과도한 정치적 개입이 진행되면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없이 KBS 이사회에는 여권이 7명, 야권이 4명 추천, 방송문화진흥회에는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
-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 제작 자율성이 침해됨

▷ 공공장의 축소 :

- 종편, 케이블 등 상업방송 채널들의 증가로 인한 방송의 상업적 경쟁이 심화
-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보다 오히려 정치·사회적 갈등의 확대 재생산함
- 공영방송의 영향력과 공적 기능이 위축 : 방송에서 공론장 소멸의 위기

▷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반영 미흡 :

- 거버넌스 구조가 다원적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수용치 못함 : 복잡하게 조직화 되어 있는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을 위한 공적 대표성이 미흡
-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가짐

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향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향으로 모색해야 함
- 선임주체 변경 : 사장추천위원회(정당, 학계, 사원) 및 이사추천위원회(정당, 학계, 사원) 신설
- 의사결정의 독점구조 완화 : 특별의결정족수 도입, 이사 수 확대
- 전문가 시스템 도입 : 문화, 교육, 영화, 스포츠, 언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중심의 이사 구성

(1) KBS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

① KBS 이사 선임

○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구 분	현 행	개선 방향
구성	▷ 11인 ▷ 의사결정 : 재적 과반 찬성	13인 또는 증원 : 다원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 ▷ 의사결정 : 사장선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 도입(2/3)
선임 절차	▷ 방통위 추천 (재적위원 과반찬성) ▷ 대통령 임명	▷ 1안 : 이사추천위원회(방통위, 국회, 학계, 사원 등으로 구성, 아래로부터 민의 반영) ▷ 2안 : 방통위 추천 시 여·야 간 심각한 불균형 해소 (11인의 경우 6:5, 13인의 경우 7:6로 구성) ▷ 대통령 임명
추천 인원	방통위 11인 (관행: 여7, 야4)	
자격 기준	▷ 각 분야 대표성 고려	▷ 전문가 시스템 도입 : 문화, 영화, 스포츠, 장애인, 종교, 언론, 정치 등 사회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시스템으로 이사회 구성
결격 사유	▷ 외국인, 당원,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방송법제48조)	-

② KBS 사장 임명

※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인물 및 의사결정 구조로 개선

구 분	현 행	개선 방향
선임 절차	▷ 이사회 제청 ▷ 대통령 임명 (국회인사청문회)	▷ 사장추천위원회(방통위, 국회, 학계, 사원 등으로 구성, 아래로부터 민의 반영)에 복수 추천 ▷ 이사회 제청(1인) ▷ 대통령 임명
이사회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 (6명 이상)	▷ 특별의결정족수 도입 (재적 2/3 또는 4/5)
해임시	재적 과반 (6명 이상)	▷ 특별의결정족수 도입 (재적 2/3 또는 4/5)
자격 기준	▷ 이사회에서 제청 기준·사유 제시	▷ 방송법 48조를 고려,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자격 기준마련 및 심사
결격 사유	▷ 이사규정준용(방송법 48조) ▷ 방송사업자 대표자 결격사유(방송법13조③)	—
해임 요건	—	▷ 현행보다 강화 — 이사회 의결(재적2/3), 결격사유, 정관 위반, 정당한 사유

(2) MBC 지배구조 개선 방향

- 2012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헌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KBS, EBS와 함께 공영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과 방송법상 특별한 취급을 받는 방송으로 규정
- 현재의 위와 같은 판결 결과 현행 MBC는 재원구조만 KBS와 다를 뿐, 동일한 공영방송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므로 KBS와 유사한 지배구조를 갖는 것이 타당할 것임

○소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 완화 : 임명권과 감독권을 방통위로 일원화함에 따른 권력집중현상

① MBC 이사 선임

○ 「방송문화진흥회법」

구 분	현 행	개선 방향
구성	▷ 9인 ▷ 의사결정 : 재적 과반찬성	▷ 13인으로 증원 : 소수 독점적 의사구조 완화 ▷ 의사결정 : 사장선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 도입(2/3으로 함)
선임 절차	▷ 방문진 추천 (재적위원 과반찬성) ▷ 방통위 임명	▷ 1안 : 이사추천위원회(방통위, 국회, 학계, 사원 등으로 구성, 아래로부터 민의 반영) ▷ 2안 : 방통위 추천시 여·야 간 심각한 불균형 해소 (13인의 경우 여7:야6 으로 구성) ▷ 대통령 임명
추천 인원	방통위 9인 (관행- 여6:야3)	
자격 기준	▷ 각 분야 대표성 고려	▷ 전문가 시스템 도입 : 문화, 영화, 스포츠, 장애인, 종교, 언론, 정치 등 사회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시스템으로 이사회 구성 (탈정치화)
결격 사유	▷ 외국인, 당원,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방송법제48조)	-

② MBC 사장 선임

○ 「방송문화진흥회법」

구 분	현 행	개선 방향
선임 절차	▷ 방송문화진흥회 추천 ▷ 방통위 임명	▷ 사장추천위원회(방통위, 국회, 학계, 사원 등으로 구성 ; 소수 독점 의사결정구조완화)가 복수 추천 ▷ 방송문화 진흥회 제청(1인) ▷ 대통령 임명
이사회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 (5명 이상)	▷ 특별의결정족수 도입 (13명 기준, 재적 2/3)
해임시	재적 과반 (6명 이상)	▷ 특별의결정족수 도입 (재적 2/3 또는 4/5)
자격 기준	▷ 이사회에서 제청 기준· 사유 제시	▷ 방송법 48조를 고려,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자격 기 준마련 및 심사
결격 사유	▷ 이사규정준용(방송법 48조) ▷ 방송사업자 대표자 결 격사유(방송법13조③)	-
해임 요건	-	▷ 현행보다 강화 - 이사회 의결(재적2/3), 결격사유, 정관 위반, 정당 한 사유

(3) EBS 지배구조 개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EBS 이사 선임

구 분	현 행	개선 방향
구성	▷ 9인 ▷ 의사결정: 재적과 반	▷ 13인 ▷ 의사결정 : 사장 중요 사항에 한정된 특별의결정족수 도입(2/3)
선임절차	▷ 방통위 임명: 재적위원 과반 찬성	▷ 1안 : 이사추천위원회(국회, 학계, 사원 등으로 구성, 아래로부터 민의 반영) ▷ 2안 : 방통위 추천시 여·야 간 심각한 불균형 해소 (13인의 경우 여7:야6로 구성)
추천인원	방통위 9(교육부장관, 교총 1인 추천 포함)	▷ 방통위 임명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	▷ KBS와 동일

▷ 사장 임명

구 분	현 행	개선 사항
선임절차	방통위 동의 (재적위원 과반 찬성) ↓ 방통위원장 임명	▷ 사장추천위원회(국회, 교육계, 사원 등으로 구성) ▷ 이사회 제청 ▷ 방통위원장 임명
선임 및 해임시 이사회 의결 정족수	—	· 이사회 제청 시 특별의결정족수 도입 여부
자격 기준 및 결격사유	—	· KBS와 동일 구체적인 자격 기준

(4) 공적 소유 언론의 지배구조 : YTN, 연합뉴스(연합뉴스TV)

- '공적 소유' 언론은 정부지원 뉴스 통신사 및 보도 전문채널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연합뉴스

- 국가기간 뉴스통신사(10조 1항)
- 대표이사 선임 : 뉴스통신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2/3)로 선임
- 이사 선임 : 뉴스통신 진흥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으로 5명 이내로 선임
- 뉴스통신진흥회 : 연합뉴스의 최대 주주로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 임원 임기는 3년,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
 - 비록 여야의 직접적인 추천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이사회 여야 추천 성향의 비율이 6대 1까지 확대될 수 있는 지배구조
 -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연합뉴스의 경영과 인사 모두에서 전권을 행사
- 정치권력의 개입 여지 : 뉴스통신진흥법에서는 구독료 및 장비구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뉴스통신진흥자금(제32조)의 명분으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정치권력에 의해 지배구조와 재원까지 좌우될 수 있는 형편
 - 2012년 연합뉴스 노조의 103일간 파업 : 직접적 원인은 공정보도 침해, 연합뉴스TV 출범에 따른 인력 운영 갈등, 사태 과정에서 대주주의 역할이 문제점으로 떠오름.
 - 2015년 3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예비 사장 후보가 불공정 보도를 지시해 2012년 파업을 유발한 인사들이었음
 - 현 박노황 사장 : 2009년 편집국장 시절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태 보도 축소를 유도해 공정보도위원회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음

▷ YTN

○ 지배구조 : YTN은 한전KDN, 담배인삼공사, 우리은행 등 공기업이 주요 주주

- 한전KDN 등 공기업들을 통해 정권이 언제라도 사장선임과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배구조 결정될 수 있는 무방비한 상황
- 2009년 10월 배석규 사장 선임시 정부 개입 의혹
- 낙하산 사장 인선 : 2015년 3월 방송 문외한인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을 YTN 사장에 내정, 전문성을 벗어난 전형적인 낙하산 사장 임명 사례

○ 민영화 위협 노출

- 2008년 YTN 사태 이후 정권 측에서 민영화설을 제기 : 신재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YTN 기자에게 “(노조가 계속 저항하면) 이명박 정부 5년 내 YTN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말함
- 연합뉴스의 뉴스Y 출범 이후 공영적 성격의 보도전문채널 2개가 양립하는 상황에서 민영화 가능성 제기

○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 부재

- 사장추천위원회, 보도국장 추천제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민주적 제도가 무력화된 상태
- 이명박 정권 이후, 정부와 여당 편향 보도 : YTN 직능단체와 언론노조 YTN 지부 등이 기자회견이나 성명을 통해 보도 공정성 촉구를 지속해옴.
- 세월호 참사 보도, 6.4 지방선거 보도 편향성 등 불공정 보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연합뉴스와 YTN도 공영방송과 같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이사 및 사장 추천,
-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와 전문성을 담아 낼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등

3)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

□ 의사결정의 투명성

▷ 자체 규정에 따른 방송사 회의록 및 속기록 작성 및 공개 현황

구분	회의록 및 속기록 작성 현황	회의록 및 속기록 공개 현황
KBS	-이사회규정 제13조에 따라 <u>의사록</u>을 작성하고 있음. -이사회 의사록에 부속한 <u>속기록</u>을 작성하고 있음.	-<u>국회 요구 시</u> 이사회에서 공개 여부 결정한 후 <u>의사록 및 속기록을 열람</u>토록 하고 있음 -법원의 문서제출요청에 따라 제출한 사례 있음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규정 제13조 및 14조에 따라 이사회 <u>회의록</u>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음 -<u>속기록은 작성 하지 아니함</u>	-<u>국회 요구 시 작성 완료된 회의록에 한하여 제출</u>하고 있음 -감사원법 제23조7호에 따라 감사원 감사 수감, 동법 제26조에 따라 서면실질 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 시 회의록 제출
EBS	-정관 제15조에 따라 ①이사회 <u>의사록</u> 작성,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14조에 따라 ①의사록, ②부의원안, ③의결서 보존 -<u>속기록</u>을 작성하여 보존	-<u>국회 요구 시</u>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제15조에 따른 회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이사회 <u>의사록 및 속기록 공개</u> -국회를 제외한 타 기관에서 속기록을 공개하도록 한 사례는 없음

▷ KBS, EBS는 속기록 작성 및 비공개 사유 등을 법에 규정할 필요

▷ 방송문화진흥회의 속기록 작성 및 비공개 사유 등을 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추가 논의 필요(경영상의 비밀 사항 등)

□ 내적 자율성 및 공정성 확보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 내부의 방송편성 규약, 제작 가이드라인 등의 규약을 이행하는 것 중요

▷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 실시: 현재 조중동이 반대하여 미 실행되고 있는 상황

3. 결론

○ 오늘날 공영언론은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있음

첫째, 상업언론에 포위되어 그 역할과 영향력이 위축되고 있음

※ 1794년부터 100년간 지속되었던 자본가들에 의한 토지 사유화에 대항 한 영국농민들의 반 인크로저(Anti enclosure) 운동이 없었으면, 오늘날 런던에는 공원이 없었을 것. 오늘날 공영방송도 비슷한 현실에 직면해 있음

둘째, 과도한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이념과잉으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치 못함.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위축

※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음. 탈 정부(extra-government)적 사회조직의 영향력이 커지고, 다양한 이익집단간의 대립이 심화되며, 다양한 인종과 다문화가 충돌하는 등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국가 사회에서 현재의 공영방송 체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공영언론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 공영언론의 존재 가치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여론 형성, 국민 화합 등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에 있음

○ 국가는 공영언론의 존재 가치를 잘 실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할 의무가 헌법에 의해서 명시됨(헌법 21조)

○ 따라서 20대 국회는 공영언론의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제를 개선하는데 노력이 필요함

□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의 위한 제도 개선

○ 방송법 제4조 3항이 방송편성 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보도, 편성,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며, 언론인들이 자기 검열에 빠져 권력이나 사주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조작해서는 안 됨

○ 방송편성규약의 제도화 : 편성 책임자, 제작 책임자, 실무자 등 책임 주체들의 대타협

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방송편성규약이 구속력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 방안으로 편집 규약 체결을 강제하고 이를 방송사업 하가의 평가 기준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편성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 이명박 정부 이후,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주장하다가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언론인들의 복직

－ 불법부당한 방송장악과 언론 탄압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토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당선인

[토론]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

[토론]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토론] 언론노조 KBS본부 성재호 본부장

[토론] MBC 박성제 해직기자

[토론] YTN 김도원 공정방송추진위원장

[토론]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토론]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우회창 공동대표

[MEMO]